

# 민주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당연”

### “혐의 진위 떠나 이스타 노동자 교통 무겁게 인식 소속 의원 공정 기준과 잣대 더 엄격히 세울 것” 홍영표 “체포동의안 가결, 내로남불 결별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상직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급 전 국회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을 가결시켰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고통과 희생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공정 기준과 잣대를 한층 더 엄격히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민생과 개혁에 치중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로남불”과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급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

은 대량해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화살뿔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록 작년 9월 당을 떠났지만 우리 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뉴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380회 임시회 현지의정활동으로 임실군 소재 미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작은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 ‘작은학교를 살리자’ | 도의회 교육위, 임실 미암초서 현장의정활동 앞서 도교육청 적극행정 조례 등 심의·의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1일 제380회 임시회 현지의정활동으로 임실군 소재 미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작은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축박이 급격히 이뤄져 미암초와 같은 작은학교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도내 모든 학교가 생동감 있고 품격 있게 살려보겠다”고 다짐했다. 강용구(남원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교육과정에 임실군과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적용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 불편하지 않고 성과가 있는 뜻깊은 학교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니고 싶은 학교로 발돋움해야 한다”면서 “도내에서 농어촌학교와 작은학교로 고집하고 있는 지역과 공유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최영심(비례대표·정의당) 의원은 “학교가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농촌유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돌아오는 농촌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면서 “초등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이 현재의 중·고등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어느 순간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제는 인근학교와의 통폐합 내지는 폐교까지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좋은 터에 자리 잡은 미암초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교육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지난 20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총 6개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는 전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가칭 ‘원주삼봉유치원 신축 등 7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전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다. 지난날 보류했던 ‘전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의에 재 상정돼 가결됐다. 또한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가칭 ‘전주에코3초등학교’ 신설과 전라중학교 이전신설, 신규 택지 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에 가칭 ‘완주삼봉유치원’ 신축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외에도 삼례중초등학교 이전 신축안을 포함한, 오봉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의 3건은 읍·면 단위의 작은 학교 노후시설 정비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과밀지역 해소와 낙후된 작은 학교 시설 정비 두 가지 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며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적 차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 “지방의정연수센터 조속 설립”... 행안부 ‘긍정’

### 송지용 도의회 의장, 이재영 차관과 면담 행안부 “필요성 인정... 의견 검토·추진”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서도 지방의원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 의장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전국시도의회협의회에서도 TF를 구성해 연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이어, “지방의정연수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에는 상당한 시간



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전북 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센터를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에서도 지방의원 연수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의정연수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지방의원 연수관련 조 직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

## 도의회 문건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1일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새만금 남북도로 개설 및 신항만 구축 현장을 방문,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문건위원들은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찾아 주요사업을 청취하고 진흥원 내부에 입주한 기업을 방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도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ICT 문화콘텐츠 사업 활성화에 진흥원이 총력을 다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건위원들은 지난해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함께, 농생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3대권역을 연결해 핵심 교통기능의 역할을 하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현장을 방문,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해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만 구축 현장을 방문,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고, 30년까지 추진 중인 1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완공될 경우 총 물동량 700만톤을 수용하는 등 전북지역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는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정린 위원장은 “새만금 남북도로, 신항만 등 SOC축적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감개무량함을 느낀다”며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내 기초의회 소식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 집수리 지원 조례안 통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주) 의원은 지난 20일 노후 저층 주거지 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주택 성능개선 지원 구역 지정,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 설치,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노후화된 구도심 상업지역 정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김윤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내 건축이 불가한 건축물 제한 완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김윤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다. 김일주 도시건설위원회장은 “주거권은 결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소중한 권리이자 가치”라면서 “전주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전주시의회는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  
**새만금개발공사 방문**  
**강팔문 사장과 현안 논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0일 합동연설회 참석하기 위해 전북을 찾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시간을 내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후보는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듣고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의 노력을 치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는 “새만금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선도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전라북도 경제발전의 핵심사업으로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와 새만금 지역에 일일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역산=정양민 기자

## 지자체별 이륜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의무 지정

### 민주 한병도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주차 구역을 조성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의 의무화,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를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을 확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폐기물처리시설 영업구역 산단 내 제한 불가

### 민주 윤준병 의원, ‘폐기물시설축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에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축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 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에도,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그 간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함은 물론, 부당한 영업구역 제한이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폐기물 발생 감량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당한 영업구역 제한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이 담보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원료와 품질(성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생원료를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호상 기자

## 안전·위생 축산물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최훈열 도의원 대표발의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부안·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380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 중에서도 ‘축산물’에 중점을 두고, 도지사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시

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